

	보 도 참 고 자 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미래창조금융•따뜻한 금융•튼튼한 금융
	6.23(화) 조간부터 보도 가능 [단 통신은 6.22(월) 19:00부터 보도가능]		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, 은행과			
책 임 자	권대영 금융정책과장(2156-9710) 이윤수 은행과장(2156-9810)	담 당 자	고영호 서기관(2156-9711) 진선영 사무관(2156-9811)	
배 포 일	2015.6.22.(월)	배 포 부 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	총 4매

제목 : 임종룡 금융위원장, 은행장 간담회 주요 요청사항
“메르스로 어려운 소상공인·중소기업, 비올 때 우산 뺏기 절대 안됨” 등

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장 초청으로 2015.6.22.(월) 19:00 “은행장 월례 간담회”에 참여하여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은행권의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부탁하였음

- 일 시: '15.6.22.(월) 19:00
- 장 소: 은행회관 16층 뱅커스 클럽
- 참석자
 - 금융위원장
 - 은행연합회장 및 16개* 국내은행장

* 수출입은행, 부산은행은 타 일정으로 불참

※ 불임: 금융위원장, 은행장간담회(6.22일) 요청사항

〈붙임1〉 금융위원장, 은행장 간담회(6.22일) 요청사항

① 메르스로 어려운 소상공인·중소기업에 “비올 때 우산 뺏기” 절대 안됨

- 메르스 때문에 소비가 크게 주는 등 경제가 위축되고 업체들이 매출이 감소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
- 최근의 어려움은 구조적 문제가 아닌 일시적 상황
→ 대출회수, 금융거래 중단은 그야말로 “비올 때 우산 뺏는 전형적인 행태” 라고 생각
- 은행과 업계는 상생 협력하는 관계인데,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금융도움을 줘야 하며 이것이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
- ① 거래 기업 중 피해기업이 있는지 은행이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 어려움을 해소하기를 요청
- ② 피해 소상공인, 중소기업 등에 대해 대출만기 연장, 금리 지원 등 금융상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, 추가 금융지원도 확대 필요
- ③ 금감원의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 접수된 메르스 관련 애로사항을 은행이 우선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당부
- 메르스 극복을 위해 범정부·전국민이 합심하고 있는 지금 “비올 때 우산 뺏는 일” 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임

② 서민·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요청

- 현재 서민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
- 손실을 보면서까지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지원하자는 의미는 아니라 차주의 신용도, 대손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업적 베이스에 기초하여 서민 금융상품을 출시·공급해 달라는 의미
 - 예를 들어 우리은행의 ‘위비모바일대출’, 신한은행의 ‘스피드업 직장인 대출’ 등과 같은 중금리 대출상품을 공급
 - * 위비모바일 대출 : 신용등급에 따라 연5.9~9.7%, 최대 1,000만원
 - * 스피드업 직장인 대출 : 재직 기간 등에 따라 5.39~7.69% 금리 적용
 - 저축은행이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은행과 저축은행간 연계한 상품 확대
- 이를 위해 서민금융지원을 은행의 내부성과체계(KPI)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유인체계를 갖춰주시길 당부

③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 강화 필요, 은행권의 노력이 매우 중요

-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·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이슈이자 아주 잘 관리해야 할 리스크임
 - ※ 7월중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
- 가계부채로 인한 문제는 은행권의 문제이기도 하며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
- 은행권 스스로 대출자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(상환능력)을 꼼꼼하게 살피는 등 스스로 적극적인 위험관리에 나설 필요
- 또한, 빚을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 나가는(분할상환) 관행을 정착시키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

④ 금융규제개혁 의지 표명과 함께 금융권의 자율책임문화 당부

- 6.15일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에 착수하였으며 금융현장의 수요와 기대에 맞도록 빠른 속도로 진행할 예정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개진 부탁[Top down + Bottom up, 민간주도 방식]

* 유형화 : 시장질서·소비자보호 → 강화 또는 정교화
과도한 건전성 →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
영업행위 → 폐지 또는 완화

* 합리화 : ①사전규제→사후책임 강화, ②선진사례 벤치마킹,
③오프라인→온라인, ④포지티브→네거티브,
⑤업권별·기능별 규제수준에 맞추어 경쟁촉진,
⑥금융사고로 강화된 규제정비,
⑦금융회사 역량에 따른 차등 규제

- 정부의 금융규제개혁 노력과 동시에 금융권 스스로 자율 책임과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 병행 필요(자율책임문화 정착)
- 규제완화 이후 생기는 문제는 일차적으로 금융권의 문제이고 먼저 엄정하게 책임지도록 할 것임
- 금융사가 원하는 수준까지 규제개혁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내부 통제기능의 강화 및 역량제고가 반드시 선행될 필요
-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그 수준에 맞추어 금융규제개혁의 수위도 결정해 나갈 예정

- ⑤ 은행에서 제안한 금융규제·제도의 개선사항이나 현장애로는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하여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수용이 어려운 내용은 그 사유를 소상히 설명하겠음